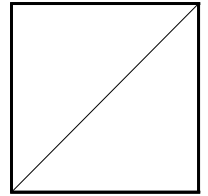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1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6. 27. (제 12 차)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6. 27.

1. 의결주문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광고 부적정’,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하나금융투자(주) 및 관련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5항
「(舊)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57조
(투자광고) 제6항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 「(舊)자본시장법」 (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49조의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호, 제2호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제29호 및 제2항
「(舊)자본시장법(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
(과태료) 제1항 제13호, 제25의2호, 제28호
「(舊)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
(과태료) 제1항 제25의2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3호, 제7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 기준) 제1항,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1호 나목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제1항 제3호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2022.5.26.) 심의필

<별지>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191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광고 부적정, 매매주문수탁 부적정,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5항, 제71조 제7호, 제249조의5 제1호, 제2호, 제449조 제1항 제13호,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8조 제5항 제3호, 제11호, 제271조의6 제1항,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제4-20조 제1항 제11호 나목

□ 직원에 대한 조치

- 전 무 ○○○○ :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 차 장 ◇◇◇◇ : 과태료 13백만원 부과*
- 차 장 ■■■■ : 과태료 11.7백만원 부과*
- 前사원 ■■■■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前부장 ▨▨▨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前부장 ▩▩▩ : 과태료 17.5백만원 부과*
- 前영업이사 ◆◆◆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제390조,
별표22

2. 조치사유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하나금융투자(주)(□□□□실)는 △△△△△△(주)의 ◇◇ ◇◇◇◇ ▲호 펀드와 체결한 TRS 거래와 관련하여,

- ◇◇ ◇◇◇◇ ▲호 펀드가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9.2.18. 부실이 발생*한 TRS 기초자산(◆◆◆◆ ▲회차 전환사채)을 고가로 매매**(액면가의 90~100%)하는 등의 위법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 ('19.2.12.) 하나금융투자의 조기상환 요구에 대해 CB 발행사(◆◆◆◆)의 불응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 ('19.2.15.)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 ▲호 펀드와 ●●●●●● 등 ▲개사가 매수

-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주)와 합의된 내용*과 달리 ◆◆◆◆ ▲회차 전환사채를 “0원”으로 정산하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하나금투와 △△△△△△은 ◆◆◆◆CB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동 CB를 “0원”으로 간주하여 TRS를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19.1.23.)

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실은 2019.1.17. ▣▣▣▣호텔에서 ▲▲은행 PB(145명) 및 임직원(11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DLF 전략 세미나*」 행사에서,

* ▲▲은행 DLF 우수 PB에 대한 시상식 개최 및 DLF 상품 관련 금리전망 등을 강연

- 행사에 참석한 ▲▲은행 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고, DLF 등 판매실적에 따라 고가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통상의 정보전달 성격의 세미나를 넘어, 하나금융투자가 발행한 DLS 관련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보답과 독려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고,

* 호텔 식사(스테이크 코스) 및 ○○○ 체중계 제공

** 최우수 및 우수 PB에게 ○○○○○ 커피머신, ○○○ 볼펜 등 제공

-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행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가 15.4백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음

다. 투자광고 부적정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48개 영업점 직원 122인은 2017.1.3.~2020.6.30. 기간 중 고객에게 ‘○○○○○○○○투자신탁’ 등 863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지점 등 18개 영업점 직원 26인은 2017.1.5.~2019.11.6.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 ○전문사모펀드’ 등 118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 투자광고 규정 위반내역 현황* >

구 분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자본시장법 §57⑥)	적격투자자 아닌 자에 대한 광고 (자본시장법 §249의5)	합 계 (중복제거)
발송점포(수)	47	18	49
발송직원(명)	122	26	124
수신고객(명)	128,472	24,112	152,584
발송메시지(건)	863	118	981

*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광고는 1건으로 산정

라. 매매주문수탁 부적정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매매주문과 접수·집행 등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실 직원 1명은 ○○○○○○○○으로부터 ■■■■■의 매매가능수량* 범위 내에서 매매를 주문('19.4.8.)받았으나

* 매수 및 매도 가능수량 각각 109,900주

- ○○○○○○○○이 요청한 매매수량을 190,100주 초과한 300,000주를 각각 매수·매도한 사실('19.4.8.)이 있음

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1) ○○○○본부 전무 ○○○은 2017.1.26. ~ 2017.12.6. 기간 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 ◆◆◆◆실 차장 ◇◇◇는 2017.10.27. ~ 2020.10.30. 타인명의(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3) ■■■■실 차장 ■■■은 2017.5.4. ~ 2020.10.20. 기간 중 타인명의(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4) 前 ■■■■■ 사원 ■■■은 2017.7.28. ~ 2018.11.12. 기간 중 타인명의(친구)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5) 前 ■■■■■ ■■■■■ 부장 ■■■은 2016.12.29. ~ 2020.10.13. 기간* 중 타인명의(배우자, 자녀) 계좌(●●●,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2016.12.29. ~ 2020.10.13.), ●●●(2017.2.7. ~ 2020.8.11.)

(6) 前 目目目目目 □□□□□팀장(부장) ▣▣▣는 2020.3.23. ~ 2020.9.18. 기간 중 타인명의(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7) 前 ◆◆◆ ◆◆◆이사 ◆◆◆는 2017.1.6. ~ 2018.12.28. 기간* 중 타인명의(배우자, 동서) 계좌(◇◇◇,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2017.1.6. ~ 2018.12.28.), ◎◎◎(2017.2.1. ~ 2018.12.28.)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

성명	소속	직위	명의	계좌개설 증권사	거래기간	거래 종목수	최대투자 원금	매매 일수
◎◎◎	①①①①① 본부	전무	본인	▶▶▶▶	'17.1.26. ~ '17.12.6.	2개	39백만원	3일
◇◇◇	◆◆◆◆ 실	차장	타인	▽▽▽▽	'17.10.27. ~ '20.10.30.	66개	82백만원	140일
■	■	차장	타인	▲▲	'17.5.4. ~ '20.10.20.	7개	14백만원	21일
■	目目目 目目	前 사원 (‘18.11.30. 퇴직)	타인	◀◀	'17.7.28. ~ '18.11.12.	105개	52백만원	180일
▣▣▣*	目目目 目目	前 부장 (‘21.1.31. 퇴직)	타인	●●●●● ●●●●●	'16.12.29. ~ '20.10.13.	200개	679백만원	616일
▣▣▣*	目目目 目目	前부장 (‘21.9.30. 퇴직)	타인	●●	'20.3.23. ~ '20.9.18.	12개	240백만원	18일
◆◆◆	◆◆◆지점	前 영업 이사 (‘19.4.30. 퇴직)	타인	▼▼▼▼	'17.1.6. ~ '18.12.28.	13개	565백만원	55일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자기의 명의를 매매할 것) 위반으로 ■■■은 벌금(1,000만원) 확정, ▣▣▣는 1심 재판 진행중

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제17호에 따라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이나 전자 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 하나금융투자(주)는 해외사무소(△△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17.6월~'19.12월 기간중 반기별 업무보고서를 기한(45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6회)이 있음

< 업무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내역 >

구 분	제출대상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지연 제출일
△ △ 사무소	'17.6월	'17.8.15.	'18.8.23.
	'17.12월	'18.2.15.	'18.3.7.
	'18.6월	'18.8.15.	'18.8.28.
	'18.12월	'19.2.15.	'19.9.24.
	'19.6월	'19.8.15.	'19.9.24.
	'19.12월	'20.2.15.	'20.3.19.
▲▲▲▲▲▲▲▲ ▲▲▲▲▲▲▲▲	'17.6월	'17.8.15.	'18.8.16.
	'17.12월	'18.2.15.	'18.3.7.
	'18.6월	'18.8.15.	'18.8.28.
	'18.12월	'19.2.15.	'19.9.24.
	'19.6월	'19.8.15.	'19.9.24.
	'19.12월	'20.2.15.	'20.3.19.

(붙임)

관계 법규

1. 자본시장법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 6개월간 ·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 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3.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57조(투자광고)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8. 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 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제2항	250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0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버.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3,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① 영 제6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

어지고 있을 것

□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함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

17.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규정 제4-79조제3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역외투자일임자의 업무보고서 포함). 다만, 해외에서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경미이외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15